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김다울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dwk129@kiep.go.kr, Tel: 044-414-1070)

이정균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Tel: 044-414-1084)



차 례

1. 2022년 북한의 대내외 환경 및 전략
2.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분석
3. 2023년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대내외 환경 및 전략] 북한은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는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 대외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미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는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 강화를 통해 우방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
 -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
 -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 등 경제협력 재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비·보강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 [주요국 대외 동향] 중국, 러시아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연쇄적으로 전개됨.
 - [북·중] 중국은 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며 전략적 연대를 지속하고 있음.
 - [북·러]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북한이 지지하는 한편, 방역정책 완화를 계기로 경제협력 재개 논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외교적 차원의 전략적 연대 또한 강화됨.
 - [북·미] 미국은 대북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제재 강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갔으며, 북한 역시 대미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 [북·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북한은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방지수단 강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

1. 2022년 북한의 대내외 환경 및 전략

■ 2022년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미·일, 북·중·러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고 있음.

- 미국은 2022년 10월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로 명시하고, 대중국 우위를 잡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¹⁾
- 러·우 전쟁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한 및 러·일의 관계도 냉각됨.
- 중국은 2022년 4월 발표한 글로벌 안보 구상에서 ‘각국의 안보는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 안보,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내정간섭 금지, 안보불가분 원칙, 일방주의 반대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 지지를 포함.²⁾
- 북한도 중국·대만 문제와 러·우 전쟁에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 러시아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

■ 2022년 북한은 경제난을 감수하면서 핵무력·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동북아 정세도 전략적으로 활용함.

- 북한경제는 대북제재와 고강도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으로 2017~21년 연평균 2.4% 역성장함.³⁾
-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경제난을 면하기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지속해서 핵무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함.
- 동시에 국제정세가 “미국이 주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변국과의 친선협조 관계 강화, 대외관계의 다각적 발전을 주문함.⁴⁾
 - 주변국과의 친선협조 관계 강화는 북·중, 북·러 관계의 확대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미국에 대해서는 2021년에 이어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이어오고 있음.⁵⁾
 -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먼저 철회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대화에 불응하며 강경한 기조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임.
- 이러한 대외전략은 분화하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질서에 편승하여 국방력 강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음.
 -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미·러 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UN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 및 실행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력·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1) The White House(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검색일: 2023. 1. 28).

2) 「시진핑 “글로벌안보구상 제안·독자제재 확대관할 남용 반대”(종합2보)」(2022. 4. 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1075352083>(검색일: 2023. 1. 28).

3) 통계청, 「북한 경제성장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31&vw_cd=MT_BUKHAN&list_id=101_001_00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BUKHAN&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2023. 1. 27).

4) 「김정은총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시정연설」(2022. 9. 9),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3. 1. 28).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2022. 6. 11),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3. 1. 28).

- 북한은 경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을 재개하였으며,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비·보강, 즉 제재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함.
 - [코로나19] 북한은 2022년 5월 최초로 북한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시인한 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하여 생산단위간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8월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선언함.⁶⁾
 - 다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추세를 볼 때 ‘코로나19 위기 종식’이라는 북한의 선언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북·중 무역] 북한은 방역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중 무역, 특히 수입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북·중 무역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정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2022년 북·중 무역액은 약 10억 2,772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의 37%,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 수준의 18%에 불과함.⁷⁾
 - 2022년 하반기 북한 내부와 중국 접경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육로무역을 이어간 것은 북한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국경봉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을 시사함.
 - [국가통제 강화] 국가경제 정상화를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정비보강’ 전략을 통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함.⁸⁾

- 본고에서는 동북아 지역 내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간 직접적인 정치·경제·외교적 교류를 다수 추진하였으므로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한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간 이벤트보다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양자관계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크므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2.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분석

가. 북·중 관계 분석

- 중국은 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등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외교적 전략으로 평가됨.

6) 한하린, 이대은(2022),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30, p.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무역액은 모두 원유도입액 추정치를 미반영한 것임. 『중국해관총서』(2019~22), <http://stats.customs.gov.cn/indexEn>(검색일: 2023. 1. 28); KOTRA(2017), 「2016 북한 대외무역동향」, KOCHI 자료 17-011, pp. 14~17(검색일: 2023. 1. 28).
 8)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김정은총비서 참석」(2022. 1. 1),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3. 1. 28).

- [대북 교류·협력] 전통적 신시대 북·중 관계에 바탕을 두고 인문, 무역, 보건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함.
- [한반도 비핵화] ‘쌍궤병행(雙軌并進)’ 원칙에 따라 정치적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밝힘.⁹⁾

■ 이에 북·중 양국은 국경통제로 대면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서교환, 보건협력, 외교문제에 대한 상호지지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였음.

- 정치적 기념일을 계기로 정상간 친서 외교와 문화교류를 실시해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중 전략경쟁과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규탄성명 채택 등의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상호 지지함.
- 북한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하자 중국은 신속하게 방역 및 의료 물품을 지원함.

■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랴오닝성, 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측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북한은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함.
- 하지만 2020~21년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중단한 것과는 달리 2022년에는 화물열차 및 트럭 운행을 통한 상품교역,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재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접경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육로무역을 지속함.
- 다만 북한의 외화벌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외관광객 유치,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코로나19 국경봉쇄에 따른 해외 잔류 인원 외) 등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19와 대북제재의 제약요인이 북·중 경제협력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북·중 간 교류·협력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함.

- [경제협력] ① 보건의료 협력 ② 북·중 무역 재개 ③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지속 ④ 북·중 온라인 무역박람회 개최
- [외교협력] ⑤ 전략적 연대 강화 ⑥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지원 등 상호 지지 ⑦ 정상간 친서 외교

1) 경제협력: 위드 코로나 전환의 조짐

■ [보건의료 협력] 2022년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시인한 이후 북·중 양국은 보건협력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방역정책을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9) 중국 외교부의 「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중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북한당국이 2022년 5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 초비상 방역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은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를 통해 의약품(해열제 등)과 방역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함.
- 중국 외교부는 “의약품 및 방역물자 지원과 관련하여 북·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전통적 우호에 따라 중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사업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방역사업은 전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로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 상호 지지, 협력 강화,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힘.¹⁰⁾
 - 북한당국이 국제사회(한국 포함)의 백신 등 보건협력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의 지원을 수용한 것은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에 기반한 합리화가 보다 용이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경우 수반되는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조한 가운데 신의주, 나선 등 접경지역과 평양 주민 대상 백신 접종 소식이 전해졌으나,¹¹⁾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 만약 북한이 중국산 백신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접종하였다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음.

■ [북·중 무역 재개] 2022년에는 북·중 육로무역이 재개되었으며, 북한 내부와 중국 접경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역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중국 외교부는 2022년 1월 17일 북·중 무역 재개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중국정부는 양국간 무역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¹²⁾
- 북한은 2021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신의주 세관 인근 의주공항에 대규모 소독시설을 설치¹³⁾하였고, 2022년 1월 하역작업 동향이 관찰됨.¹⁴⁾
- 1월 재개된 육로무역은 4월 말 중국 접경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통제하면서 중단되었다가 9월 중순 재개되었으며, 11월에 단둥지역 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다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과거와 달리 육로무역이 지속되었음.
 - 북·중 간 해상운송은 대량의 소품종을 중심으로, 육로운송은 소량의 다품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입품목의 다양성 측면에서 육로운송이 갖는 의미가 큼.
- 한편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이 중단되었던 5월부터는 기존의 해상교역을 점차 확대하였고, 6월 중순에는 북한당국이 선박 통제조치를 완화하였음.¹⁵⁾

10) 「2022년5월13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外交部,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205/t20220513_10685849.shtml(검색일: 2023. 1. 25).

11) 「김정은 백신 접종 언급하더니...신의주·남포선 이미 접종 시작」(2022. 9. 15), 『Daily NK』, <https://www.dailynk.com/20220915-1/>(검색일: 2023. 1. 19).

12) 「2022년1월17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外交部,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201/t20220117_10596917.shtml(검색일: 2023. 1. 19).

13) 「[단독] 北, 8월 초 의주비행장 방역 시설 가동...반입 물품 신청서 받기 시작」(2021. 7. 30), 『SPN서울평양뉴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2>(검색일: 2023. 1. 19).

14) 「1년 반만의 북한 첫 화물열차, 의주 비행장서 하역작업 포착」(2022. 1.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2026400009?input=1195m>(검색일: 2023. 1. 18).

15) 「북중 화물열차 중단 석달...해상교역 의존, 선박 확보 경쟁」(2022. 7. 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iew/AKRv20220720148400097>(검색일: 2023. 1. 18).

- 북·중 간 육상무역이 재개됨에 따라 수입물품 구입 및 계약을 위해 일부 북한 기업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하는 등 소규모의 인적 왕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¹⁶⁾
-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무역을 비롯하여 중단 혹은 대폭 축소되었던 북·중 간 경제교류가 점차 정상화될 가능성을 보여줌.

표 1. 북·중 육상 및 해상 무역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22년 1월 17일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2022년 4월 29일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중단
2022년 5~9월 중순	중국 산둥성 룡커우·북한 남포항 해상교역 점진적 확대 및 선박 통제 완화
2022년 9월 중순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자료: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북·중 온라인 무역박람회 개최] 2022년 북·중 국제상품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간 교역방식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시도로 해석해볼 수 있음.

-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경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온라인 박람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됨.
- 박람회는 4월 28일~6월 28일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당, 군대, 내각 및 각 직속 회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150여 개 북한기업과 200여 개의 중국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인터넷쇼핑 플랫폼인 만물상(萬物相), 성성(星星)에 전람회 참가 기업과 상품 관련 정보를 등재하고 온라인 상담 진행, 전람회 종료 후 1년간 게재 유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
 - 가전·가구, 인테리어 자재, 전자·전기, 기계설비, 농업설비, 의료보건 설비 및 상품, 일상 생활소비품, 식품, 보건품, 증의약, 의류, 가정용 직물 등의 품목이 참가함.
- 실제 기업들의 참가 여부와 행사 성과는 발표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전시'라는 특성상 높은 전람회 참가 비용에 비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북한 참가 기업의 비제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북·중 무역 재개와 함께 북·중 무역박람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양국의 무역 재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됨.
 - 코로나19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던 '조중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향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될 가능성도 존재함.

■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지속] 대북제재, 국경봉쇄 상황에서 중국의 단둥항 확장 및 신압록강대교 정비, 지린성 창바이시 호시무역구 건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 중국당국의 지방경제

16) 북한이탈주민(양강도 해산, 2010년 탈북) 유선 인터뷰(2023. 1. 27).

발전 목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기반 확대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중국 국무원이 단둥항 확장 및 개방을 승인하면서 랑터우항 2개, 따타이즈항 2개의 총 4개 정박지 건설이 주목받고 있음.¹⁷⁾
 - 랑터우항은 UN 대북제재 이전 북한산 석탄, 따타이즈항은 북한산 농수산물을 반입하는 소규모 항구들로 정박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승인을 통해 정박지 건설이 완료될 경우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이 신압록강대교 보수·정비 공사를 4~5차례 진행하였고, 북한은 신압록강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는 등 모습을 보임.
- 단둥시 동항에 새로운 호시무역구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호시무역구에서는 중고가 제조품 및 패스트푸드 상품 위주의 호시무역과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가공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¹⁸⁾
- 지린성 창바이 변경경제합작구 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착공한 지린성 창바이시 접경 호시무역구의 콜드체인, 물류, 창고 등 시설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하는 등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음.¹⁹⁾
- 중국정부는 단둥지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지린성 창바이 지역을 창바이산(한국명: 백두산) 국제관광지대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 방역정책이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북·중 간 관광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외교협력: 전략적 연대 지속

- [전략적 연대 강화] 2019년 이후 북·미 관계 담보, 미·중 전략경쟁, 러·우 전쟁, 한·미·일 동맹 강화 등 동아시아 지역 내 불안정한 정치적·경제적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은 전략적 연대를 유지하고 있음.
 - 북·중 양국은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정은 방중 4주년, 북·중 우호조약 체결 61주년 등 과거 양국간 정치적 행사를 회고·기념하는 한편, 장쩌민 주석 애도 등 양국 기념일 및 애도일을 계기로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으며 강한 유대감을 표명함.
- [외교적 지지]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안건에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며 외교적으로 지원하였고, 북한 또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중국을 지지하며 양국간 관계를 공고히 함.

17) 「중국, 北 교역거점 단둥항 확장 추진..북중 교역 확대 포석」(2022. 12. 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2119300097?input=1195m>(검색일: 2023. 1. 20).

18) 「북한 교역거점 중중단둥, 호시무역구 추가 조성..수입품 가공 생산」(2022.12.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30058700097>(검색일: 2023. 1. 20).

19) 「吉林长白边境经济合作区管理委员会长白县互市贸易区冷链、物流、仓储中心建设项目公开招标公告」, 『中国政府采购网』, http://www.ccgp.gov.cn/cggg/dfgg/gkzb/202208/t20220825_18524506.htm(검색일: 2023. 1. 20).

-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UN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대해 ‘어떤 국가도 자국의 법을 제3국에 적용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함.²⁰⁾
 - o 또한 미국의 패권 지위 유지를 위한 불법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북한을 변호
- 북한은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대회,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는 한편, 대만·홍콩 문제, 미·중 전략경쟁,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안보 구상’ 등의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함.
 - o 시진핑 주석은 2022년 5월 보아오 포럼에서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안보 구상’을 제안
- 북·중 간의 이러한 외교적 연대는 UN 안보리 차원의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정상간 친서 외교] 양국 정상의 친서 외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빈번해졌는데, 이는 국경봉쇄 상황이 지속되며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간 ‘친서 외교’를 통해 양국의 전통적·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임.

- 친서 외교는 정상간의 직접적인 소통 수단으로 양국간 관계 유지,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과 친서 외교를 통해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왔음.
- 양국간 기념일 축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위로, 장쩌민 주석 사망 애도 등을 계기로 정상간 친서를 교환하며 양국간 전통적·전략적 관계를 강조함.
- 2022년 정상간 친서에서는 전통적인 ‘16자 방침’이 생략된 대신 ‘신시대 북·중 관계’에서 강조한 전통적 조중 친선, 전략적 의사소통 유지, 조율과 협조 강화 등이 언급됨.

표 2. 최근 5년간 북·중 정상간 친서 교환 횟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김정은 총비서 → 시진핑 주석	3	3	6	7	7
시진핑 주석 → 김정은 총비서	0	4	5	5	4

자료: 『노동신문』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북·러 관계 분석

■ 북·러 양국은 2022년 국경 봉쇄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위급 인사간 대면 접촉을 통해 경제협력 재개를 논의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지원, 상호지지 등을 통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였음.

20) 중국 외교부의 「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중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2022년 국경 통제조치 유지 상황에서 양국 고위급 인사간 경제협력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이 재개되었음.
- o 고위급 접촉에서는 나진-하산 철도 노선 복원, 북·러 국경 차량용 교량 건설사업 재개,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 확대방안 등 경제·통상, 과학기술 협력 등 광범위한 경제교류 협력 사안을 논의함.
- 양국은 ‘친선·협조 관계,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강조하며 정치적 기념일을 계기로 정상간 친서 외교, 러·우 전쟁에 대한 러시아 지지, 대북제재 추가 결의 반대 및 완화 제안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지지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였음.
- o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대러시아 지지 표명은 돈바스 지역의 전후 복구과정에서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과 산업(중화학공업) 협력, 무기수출 등 실질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제반 문제에 관하여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한다”²¹⁾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북한과 경제협력 논의를 재개하는 등 중국과 같이 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는 대북정책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 러시아는 2021년부터 중국과 함께 북·미 협상 및 6자 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UN 안보리 측에 민간 부문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해왔음.
- [대북 인도적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의적절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 강조함.
- [서방국가의 대북정책 비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함.

■ 이하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북·러 간 교류협력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함.

- [경제협력] ① 북·러 경제협력 논의 재개 ② 북·러 철도화물 운송 재개 ③ 관광산업 협력방안 모색 ④ 보건의료 협력
- [외교협력] ⑤ 외교적 상호 지지 ⑥ 무기 수출 가능성 ⑦ 돈바스 지역 노동자 파견 ⑧ 정상간 친서 외교

1) 경제협력: 논의 재개 및 공감대 형성

■ [북·러 경제협력 재개 논의] 북한은 2022년 초부터 러시아 고위급 인사와 경제협력 재개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나, 대부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는 미흡함.

- 양국 고위 인사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 나진-하산 철도 노선 복원 △ 북·러 국경 차량용 교량 건설사업 재개 △ 러시아 내 북한 유학생 확대방안 등을 논의함.
- 2022년 2월과 6월 신흥철 주러시아 북한대사는 알렉세이 체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코로나

21) 「러 "북핵 평화적 해결지지..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지난해 제안(종합)」(2022.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1138551080>(검색일: 2023. 1. 25).

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²²⁾

- 신흥철 대사의 러시아 내 행보 직후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및 국제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²³⁾
- 2022년 8월, 신 대사와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 '비행 안전성제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²⁴⁾
- 2022년 9월, 신 대사는 올레크 코제야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를 만나 화물운송 재개를 약속하였음.²⁵⁾
- 이 과정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신 대사의 행보가 두드러진 만큼 향후 신흥철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북·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북·러 무역 재개] 2022년 11월 북·러 간 소규모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는데, 이는 '북·러 교역의 점진적 정상화의 시작'일 가능성과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수출)을 위한 임시적 운행'일 가능성이 모두 있으며,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북한은 2021년 하반기에 두만강역 개보수 및 방역시설을 갖춘 하역장·창고시설 추가 건설을 완료하는 등 북·러 무역을 위한 설비를 확충하였음.
- 이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교역을 재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비록 소규모에 불과하나 북한이 북·중 교역에 이어 북·러 육로무역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큼.
- 그러나 미국 백악관 등에서는 2022년 11월 18~19일 이루어진 북·러 간 열차 운행을 무기거래로 규정하는 등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²⁶⁾
- 북·러 무역이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향후 북·러 간 화물열차 운행의 지속성과 빈도, 교역규모와 품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광산업 협력 논의] 북한 관광총국과 연해주 정부 간에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²⁷⁾ 관광은 인적 왕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함.

22) 「북한, 중국 이어 러시아와도 '단계적 교역 회복' 논의」(2022. 2. 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30775000009> (검색일: 2023. 1. 25).

23) 「북, 중국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재개 징후... 잇단 고위급 접촉」(2022. 2. 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9014051504>(검색일: 2023. 1. 25).

24) 「북한-러시아 '항공안전제고' 협정 체결... 국제선 재개 주목」(2022. 8. 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9064100504>(검색일: 2023. 1. 26).

25) 「北·러 철도운송 재개... '김정은 백마' 같은 종 30마리 실어」(2022. 11. 2), 『연합뉴스』, [20221102049151096?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49151096?input=1195m)(검색일: 2023. 1. 26).

26)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SC Coordinat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John Kirby"(2023. 1. 20),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3/01/20/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and-nsc-coordinator-for-strategic-communications-john-kirby-8/>(검색일: 2023. 2. 8).

27) 「철도 화물운송 재개한 러·北,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모색」(2022.1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4031000096?input=1195m>(검색일: 2023. 1. 26).

- 연해주 관광청은 북한 관광총국과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협정에는 양국의 기존 관광로에 대한 정보 교환, 새로운 관광 경로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전시회 등 관광 분야 행사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

■ [보건의료 협력]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북·러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러시아가 북한에 백신, 의약품, 진단키트 공급 및 전문가 파견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음.²⁸⁾

- 러시아 외무부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신흥철 주러 북한대사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한 북·러 협력과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²⁹⁾

2) 외교협력: 전략적 연대 강화

■ [외교적 상호 지지] 북한이 러·우 전쟁 사안에 대한 대러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러시아 또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간에 지지하였으며, 이는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국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다방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북·러 양국은 김일성 110회 생일,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정은 방러 3주년, 북·러 공동선언 22주년, 북·러 국교 수립 74주년 등 양국간 정치적 행사 기념을 계기로 친선협조 관계를 강조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표명함.
-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UN 안보리 회의에서 규탄안 성명 채택과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중국과 함께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함.
 - 2017년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2022년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됨.
- 북한 또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공식 인정하고,³⁰⁾ 미국과 NATO의 대러시아 대응을 비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함.
 - 2023년 1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을 지지한 것'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과의 포괄적인 관계 발전에 이 일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여,³¹⁾ 이러한 외교적 지원이 포괄적 북·러 관계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함.

28) 「러시아 "북한에 백신 제안했으나 무반응"」(2022. 6. 1), 『VOA』, <https://www.voakorea.com/a/6598549.html>(검색일: 2023. 1. 26).

29) 「北 러시아에 코로나19 대응 도와달라」(2022. 5. 18),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8000007>(검색일: 2023. 1. 26).

30) 「북한, 돈바스의 친러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승인」(2022. 7. 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780551080>(검색일: 2023. 1. 25).

31) 「러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지원한 북한에 감사"」(2023. 1. 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139100088>(검색일: 2023. 1. 29).

- [무기수출 가능성]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북한은 국방성 부국장 담화 등을 통해 이를 공식 부인함.³²⁾
 - 그러나 백악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이것이 와그너그룹에 대한 미국 재무부 제재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북한의 무기이전 금지에 대한 UN 제재 위반임을 지적함.³³⁾
 - 38 North에 따르면 북·러 국경의 철도 야적장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 너머 50m 간격으로 초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구역 내부에는 두 겹의 펜스와 추가 초소가 관찰되어³⁴⁾ 북·중 교역의 거점인 의주 검역장에 비해 보안이 강화되어 있음.

- [돈바스 지역 노동자 파견] 북한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독립국 승인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대한 북한노동자 파견이 논의되었으나, 러·우 전쟁 종료 전에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022년 8월 러시아 주재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대사가 신흥철 주러시아 북한대사와 만나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기간시설 및 산업시설 복구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³⁵⁾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한 러시아 대사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노력에서 러시아의 유용한 자산’이라고 언급함.³⁶⁾
 - 과거 북한과 도네츠크 지역은 석탄(도네츠크산 점결탄), 마그네사이트(북한산)와 같은 지하자원을 거래해 왔으므로 전후 기간시설 및 산업시설 복구에 북한 노동자 투입을 넘어 산업협력의 가능성 또한 존재함.
 -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은 UN 회원국이 아니므로 UN 대북제재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북한과 해당 지역 간 폭넓은 협력 가능성이 재기된 이유 중 하나임.
 - 그러나 러시아가 9월 30일 해당 지역에 대한 편입을 선언하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을 탈환한 이후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북·러 협력의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음.

- [정상간 친서 외교] 북·러 양국 정상간 ‘친서 외교’는 2021년보다 확대되었는데, 외교적 상호지지 등을 계기로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정치적 기념일을 계기로 정상간 친서를 통해 ‘친선협조 관계’, ‘쌍무관계’, ‘전략전술협동’, ‘지지연대’ 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고 평가함.
 -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러시아 지지와 군사협력 논의의 정황을 고려할 때 2022년 북·러 관계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제로 강화 및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임.

32) 「북, 우크라인 관련 러시아 지지하지만…“무기·탄약 수출 안 해」(2022. 11. 8), 『한겨레뉴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6209.html>(검색일: 2023. 2. 6).

33)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SC Coordinat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John Kirby”(2023. 1. 20),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3/01/20/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and-nsc-coordinator-for-strategic-communications-john-kirby-8/>(검색일: 2023. 2. 8).

34) 「38노스 “북러 철도무역 순조롭게 진행…北 세상에 문 여는 신호」(2022. 12. 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301100071>(검색일: 2023. 1. 26).

35) 「북한, 도네츠크 이어 루한스크에도 건설노동자 파견 추진」(2022. 8. 13), 『연합뉴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8131023401879(검색일: 2023. 2. 8).

36) 「러시아, 돈바스 재건에 북한 노동자 고용…양국 “긴밀 협력」(2022. 8. 5),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80412523997147c4c3f170b_1/article.html?md=20220805100035_U(검색일: 2023. 1. 26).

표 3. 최근 5년간 북·러 정상간 친서 교환 횟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김정은 총비서 → 푸틴 대통령	5	2	3	2	4
푸틴 대통령 → 김정은 총비서	2	4	3	1	2

자료: 『노동신문』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북미, 북일 관계 분석

■ 2022년 북·미 관계는 양자간 이벤트보다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연쇄적으로 전개됨.

-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가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양자간 직접적 대화 및 교류가 많았던 것과 대조적임.
- 북·미 관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일차적으로 북핵 협상이 정체된 데 따른 것임.
-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보다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 이하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북·미, 북·일 관계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함.

- ① 확장억제 강화 ② 한·미 연합훈련 확대 ③ 한·미·일 공조 ④ 독자제재 강화 ⑤ 외교적 관여 ⑥ 일본 방위력 강화

■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응태세 및 한미동맹을 강화함.

-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재래식·미사일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겠다고 공약함.³⁷⁾
- 또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SD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후 2022년 9월 ESDCG가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어 확장억제 및 전략자산 적시전개의 실행력 제고방안 등이 논의됨.³⁸⁾
 - ESDCG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과 인태지역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국방·외교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확인하고 강조함.
 - 도상연습, 핵·비핵 위협 관련 정보공유, 훈련·연습을 통한 전략적 준비태세 강화,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우주·사이버 영역의 협력 강화 등을 대북 억제력 강화 및 한·미 안보공조 강화의 방안으로 제시함.

37)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2. 5.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87757#blueHouse>(검색일: 2023. 1. 27).

38)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2022. 9. 19),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407(검색일: 2023. 1. 28).

- 뒤이어 2022년 11월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서도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 연계개최 등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함.³⁹⁾

■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22년 하반기에 한·미 연합훈련이 연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반발성 무력시위를 지속함.

- 2022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약 4년 8개월 만에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실제 병력 기동훈련으로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5년 만에 미 핵항모(핵추진항공모함)가 출범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함.
- 10월에는 합동참모본부 주관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에 미군이 참여하였으며, 11월에는 ‘비질런트스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12월에는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실시됨.
-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2022년 대폭 강화된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 강한 어조로 비난하며 시위성 무력 도발을 감행함.
- 한·미 연합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시위성 무력도발, 강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안보동맹의 강화가 서로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내 긴장 수위가 고조됨.
- 2023년 3월에도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전후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표 4. 2022년 하반기 주요 한·미 연합훈련 및 북한의 반응

한·미 연합훈련	주요 내용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실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위기관리연습 중심 사전연습(8. 16~19) • 북한, 서해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8. 17) • 한·미, 야외기동을 포함하여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실드’ 실시(8. 22~9. 1) • 북한, 한·미 연합연습 비난 성명 발표(9. 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제화(9. 7~8) • 한국, ‘핵사용 기도 시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 국방부 입장표명(9. 13)
한·미 해상연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한미 연합해군훈련을 위하여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부산 입항(9. 23)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9. 25) • 한·미, 해상연합훈련 실시(9. 26~29)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9. 28~29) • 한·미·일, 동해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9. 30) •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상공 통과(10. 4) • 한·미·일, 로널드 레이건호 동해로 재전개 및 추가 연합훈련 실시(10. 5~6)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 6)
호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합참본부 주관 야외 기동훈련에 미군 참여(10. 17~28)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 28)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 실시(10. 31~11. 4)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과 다수 미사일 발사, 최초로 동해 NLL 이남 공해에 낙하, ICBM 발사 실패(11. 2~3)

39)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22. 11. 4), 국방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09> (검색일: 2023. 1. 28).

한·미 연합훈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용기 180여 대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 및 동·서해 상에서 활동(11. 4) • 한·미, 한국군 대응사격 및 공중전력 긴급출격,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장(11. 2~11. 5) • 북한, 서해로 탄도미사일 발사(11. 5) •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11. 9)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11. 17) • 북한,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 담화 발표, 탄도미사일 발사(11. 17) • 북한, 동해상으로 ICBM 발사,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11. 18) • 한·미, 북한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타격훈련 및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11. 18)
한·미 연합공군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12. 18) • 북한, 정찰위성 시험발사(12. 19) • 한·미, 공군연합훈련 실시, 미 공군 주요 전략자산 한반도 출격(12. 20)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2. 23) • 북한,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12. 26)

자료: 언론보도와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미·일 공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삼국간 공조가 대폭 강화됨.

- NATO를 계기로 2022년 6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11월 프놈펜에서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⁴⁰⁾
 - 해당 공동성명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대 등의 내용이 선언됨.
- 한·미·일 고위급간에도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공조된 반응이 확대됨.
 - 일례로 UN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⁴¹⁾
- 군사 부문의 공조도 확대되어 프놈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⁴²⁾
 - 현재는 한·미, 미·일 양국 간에만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통해 사후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잠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등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루어졌으며, 10월에는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미국 핵항모가 한반도로 재전개하여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함.
- 또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3개국이 연쇄적으로 북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함.⁴³⁾

40)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2022. 11. 14),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TTQfh7An>(검색일: 2023. 1. 29).

41)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2022. 9. 23),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423(검색일: 2023. 1. 29).

42)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2022. 11. 14),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TTQfh7An>(검색일: 2023. 1. 29).

43)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12. 2) 결과」(2022. 12. 2),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96(검색일: 2023. 1. 29).

-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프놈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비난하고, 44) 탄도미사일과 ICBM을 발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한·미·일 공조 강화는 우리나라에 안보 측면의 유익을 가져다주나, 그 반대급부로 북·중·러의 연대 강화를 야기하고 한반도의 진영화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

■ [독자제재 강화] 미국은 2022년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가상화폐 탈취, 대북 석유수출, 인권침해 등 여러 명목으로 대북제재를 부과함.

- 2022년에 미국은 11차례의 재무부 대북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2021년 단 두 차례 제재를 추가하였던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임.
- 북한의 무력도발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UN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임.
- 제재 대상 중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것뿐 아니라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해 거래소 계좌와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를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이 주목할 만함.
 - o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3월 17만 3,600이더리움과 2,550만 달러에 달하는 코인, 6월 8만 5,800이더리움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하였으며, 이는 탈취 당시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약 6억 8,000만 달러가량에 해당함. 45)
-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가상화폐 탈취혐의를 부인하고, 46) 핵무력에 관한 이중기준 적용,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라며 비판함. 47)

표 5. 2022년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목록

일시	제재 내용
1월 12일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인 6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개 제재
3월 11일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러시아인 2명, 러시아 단체 3개 제재
4월 1일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단체 6개 제재
4월 14일	북한 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 지갑 1개 제재
4월 22일	북한 가상화폐 관련 가상화폐 지갑 3개 제재
5월 6일	북한 가상화폐 관련 믹서 업체 제재, 가상화폐 지갑 4개 제재
5월 16일	북한 IT 기술 근로자 위장취업 주의 권고
5월 27일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인 1명, 러시아 단체 3개 제재

44) 「北최선희 "군사대응 맹렬해질 것...美 후회할 도박하고 있어"(종합)」(2022. 11. 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7037451504>(검색일: 2023. 1. 29).

45) 1718 Sanctions Committee(2022),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27," S/2022/668, pp. 668-669.

46) 「북한 "美 사이버제재, 압박 분위기 고취 의도...북미관계 악영향」(2022. 5. 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7035800504?section=search>(검색일: 2023. 1. 29).

47) 「북한 외무성 "미국, 핵무력에 이중기준...일방적 대북제재」(2022. 6. 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73600504?section=search>(검색일: 2023. 1. 29).

일시	제재 내용
10월 7일	대북 석유수출 관련 대만인 1명, 말레이시아인 1명, 싱가포르인 1명, 싱가포르 단체 2개, 중국단체 1개, 말레이시아 단체 1개 제재
11월 8일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인 1명, 중국인 1명, 가상화폐 믹서 업체 제재
12월 1일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인 3명 제재
12월 10일	인권침해 관련 북한 국경수비대 제재 북한 제재업체의 금융거래 지원 단체 7개 및 개인 2명 제재

자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recent-actions>, 검색일: 2023. 1. 2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외교적 관여] 미국은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외교적 관여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음.

-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와중에도 인도적 목적의 교류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시적으로 북한 측에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 또한 미국이 COVAX 등 국제사회에 지원한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포함.⁴⁸⁾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확대에 대해 대북적대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일체의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대화 채널에 불응하며 강대강, 정면돌파 기조로 대응함.

■ [일본 방위력 강화] 일본은 고조된 북핵위험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하여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2022년 방위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대내정치적 준비를 지속해왔으며, 11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을 발표함.⁴⁹⁾
 - 해당 개정안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확대를 골자로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개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함.
 - '공격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평화헌법 9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조치로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북한은 국방력 강화 및 실제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함.⁵⁰⁾

48) 「미 정부 "미국이 기부한 코백스 백신, 북한 지원 지지"」(2022. 5. 14),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_h=N1006749963&plink=LINK&cooper=YOUTUB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검색일: 2023. 1. 29).

49) 박명희(2022),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12. 1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04호, 국회입법조사처.

50) 「북한, 日 '적기지 반격' 채택에 엄포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2022. 12. 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0045700504?section=search>(검색일: 2023. 1. 29).

3. 2023년 전망과 시사점

■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 분화와 경제난 심화 등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대외적으로 한·미·일·북·중·러 진영화 구도를 강화하여 이익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제6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맞게 국권과 국익을 사수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힘.⁵¹⁾
- 이로부터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개발의 지속에 대한 명분 획득, 무력도발에 대한 UN 안보리의 대응력 약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러·우 전쟁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북한의 대러시아 지지는 외교적 차원을 넘어 정치·외교·경제 다방면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대외전략은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북한의 대중·대러 지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 유지·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지 명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무력도발 지속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며, 이미 국제화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북·중 무역 회복이 북한 경제난 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하반기의 북·중 무역 추세로 볼 때 2023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방역정책을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북·중 무역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중간재와 소비재 공급 부족에 따른 산업침체, 물가상승 등은 가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HS 코드 72~83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UN 대북제재 대상으로 여전히 수입에 제한이 있으며, 수출의 경우 코로나19보다 대북제재의 제약이 더 컸으므로 정상 수준을 회복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경통제가 완화되면 북·중 간 비공식 무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북제재 품목의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인적교류를 재개하는 데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2023년 하반기에는 북한 또한 방역정책을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하고 북·중 간 관광 등의 경제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관광은 UN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중 관광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의 주요한 외화수입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북·중은 코로나19 이전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중국 측 접경지역의 교통, 세관 인프라,

5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2023. 1. 1), 『조선중앙통신』(검색일: 2023. 1. 29).

관광시설 등을 확충하여 관광협력을 준비해왔음.

- 관광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주요 관광지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한 후 소수그룹에 대한 당일관광의 형태로 재개될 수 있음.
- 한편 북·중 양국이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하고 인적왕래를 허용할 경우 방역 목적의 국경통제를 이유로 중국에 남아 있던 북한 파견노동자의 송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임.

■ 북·러 간 군사, 관광, 무역, 해외노동자 파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외무차관은 2023년 1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특수 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과 포괄적인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함.⁵²⁾
 - 이는 북·러 간 다방면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북한 관광총국과 연해주 정부는 관광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방역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광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소규모로 재개되기 시작한 북·러 간 화물열차 운행이 본격적인 북·러 무역재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의 전후복구를 위해 북한 노동자 파견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음.
 - 그러나 러시아가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을 선언한 만큼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공식화하거나 전면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재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을 선언한 만큼 비핵화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만한 유인책이 제공될 가능성도 낮음.
- 또한 UN 안보리가 연이어 탄도미사일 규탄성명 채택에 실패하는 등 북핵문제에 관한 주요국 협력이 어려운 상황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력이 현 수준보다는 높아질 수 있으나, 실제적인 비핵화 행동을 견인할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북한은 러·우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중 경쟁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등 불리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왔음.

■ 우리나라는 북한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억제수단 강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국제사회의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

- 2023년에는 북한과 접경 국가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통한 북한의 외화수급 규모와

52) 「러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지원한 북한에 감사」(2023. 1. 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139100088> (검색일: 2023. 1. 29).

경제회복 수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북한의 경제회복은 강대강·정면승부, 국방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2023년 정책방향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외화수입을 통해 무기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대외 경제협력이 미미하였던 2020~22년 중 북한이 외화를 획득한 주요 수단은 가상화폐 탈취로 판단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군사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기 고조 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 측과의 대화 채널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필요함.
- 북핵 문제는 국제문제화 되었으므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 고조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여론을 강화하고,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KIEP**